

#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 '한뫼'

### 호남권 시·도지사, 정부에 건의·공동유치 선언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는 25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고 공동유치를 선언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호남권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방사광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

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가속기가 연계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해 광주의 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 신소재·의료 바이오 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호남권 소재

21개 대학 총장과 교수,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과 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남의 시도민들도 열망하고 있다"며 "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전남에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는 전북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원대학'이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TF를 구성, 내년 말 통합 예정인 민간공항 명칭문제,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기로 했다. /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미국발 입국자 조치, 27일 0시부터 시행"

### 요양병원 집단감염도 지적... 간병인 우선 진단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 불안감을 느끼는 유학생 등 국민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려고 한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라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검역을 강화해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산발적 집단감

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간병인은 먼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교령의 고위험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병원 내 감염은 의료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 "간병인들 관리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병원에 상시 출입하고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며 "요양병원 간병인 이력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뉴스

## 전북도, 긴급 경제상황 점검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경제활력 방안 모색

전북도는 25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전북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KOTRA지원단, 한국은행전북본부 3개 유관기관과 전북경제진흥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3개 출연기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번 긴급 회의는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경제단체가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전북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와 견해를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활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과거 2003년 사스 발생 시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반되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2015년 메르스 발생 시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연구원은 제조업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될 경우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5~3.0%p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이 건의

하고 제시한 사업들과 소상공인 및 직접 피해기업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추경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전북연구원의 경제분석센터 가동 및 TF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극복대책을 마련해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분야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과 더욱 소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5일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경쟁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도내 농식품 기업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그간의 지원사업들을 수출 기업이 필요한 사업 위주

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 메뉴화해 지원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도내 소재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사업메뉴는 수출 사전준비,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분야로 세분화해 피해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도금액(최대 20백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도홈페이지 공고에서 내려받은 신

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역본부(dream7@ator.kr, 문의 063-904-5874)로 접수하면 된다.

강해원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코로나19 발병으로 국내외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우려가 큰 만큼, 이번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지속적 시장개척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내달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

### 아동·노인장려금도...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4월 중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이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

사업 수급자 약 16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 간 상품권 등 총 40만~52만원 상당이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26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개월 간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